



가뭄 극복 '물그라미' 실천해요 / 광주시 동구 주민들로 구성된 '물그라미 주민실천단' 단원들이 16일 산수동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가뭄 극복과 물 절약 실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주민실천단은 수압조정 전문가, 통장, 관리사무소 직원 등 총 123명으로 구성돼 수압 조정 및 물 절약 실천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일본서도 “강제동원 배상 일본이 해야”

학자·변호사·시민사회 등 '제3자 보상안' 강력 비판

일제 강제동원 책임은 일본에 있고 사과와 배상은 일본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일 양국에서 나왔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 주최로 '윤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2일 정부가 공개 토론회를 통해 대외 변제를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한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이국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봉태 변호사, 한예인 성균관대 동아시아사연구회 소 객원연구원 등이 참석해 법률을 기반으로 정부의 대외 외교를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외교부가 강제동원 배상의 해결책으로 공식화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인정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은 '청구권절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달러는 강제동원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헌법을 모욕하고,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나서서 방해하고, 오히려 일본 피고기업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는 외교부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박진 외교부장관 탄핵안을 결의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일본에서도 수십년 동안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일본은 빠진 채 제3자가 보상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학자·변호사·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94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피해자 부재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 '징용공' (강제동원) 문제, 일본 정부-일본 기업에 호소한다'는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일본 기업이다. 민사소송에서 강제노동 사실, 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피해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며 "피고 기업의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받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충장로 간판 교체' 정부 공모사업 반대하는 업주

## “40년 유지한 간판 바꾸라니” “산뜻한 거리 정비에 동참을”

광주 동구청, 288곳 중 3곳 사업 참여 반대에 난항 불법 광고물 강제철거 예고...업주 “이해할 수 없어”

광주시 동구청이 충장로 일대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인 간판 개선사업을 진행하다 일부 업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 대상 업소 288개소 중 3개 업소가 사업 참여에 반대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사업을 매듭짓지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동구청은 지난 11일 이들 업소의 간판이 불법 옥외광고물인 점을 지적하며 강제 철거를 예고하고, 업주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200만원씩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업주들은 “40여년간의 과태료 한 번 매기지 않았던 간판인데, 정부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불법이라며 철거한다니 황당하다”고 반발해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 2020년부터 충장로 1~4가에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간판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24년까지 국비 5억 5000만원과 시비 2억 7000만원, 구비 5억 2000만원을 투입해 건물 132동 288개 업소의 간판 547개를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동구청에 앞서 각 업소를 돌며 사업 참여 동의를 받았는데, 충장로2가 2개소와 충장로3가 1개소 업주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 다만 동구청은 이들 업소도 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사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사업에 앞서 배포한 '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동구청이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획서는 사업대상 업소를 선정할 때 업주에게 사업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건물주·업주가 동의한 업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통일된 디자인과 돌출간판으로 인한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구역 내 모든 업소가 동참해야 통일성 있게 거리가 정비되고, 상인들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강제 철거'와 관련해해서도 동구청과 업주의 의견이 엇갈렸다.

동구청은 이들 간판이 당초 불법 옥외광고물이었기 때문에 강제 철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에서 옥외광고물 인·허가 절차를 밟거나 신고 연·경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간판이라는 것이다.

업주들은 “동구청이 이들 간판에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것을 경고한 적 없어 자신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동구에만 2만 3000여개 간판이 있는데, 하도 불법 간판이 많다 보니 신고 안 된 간판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며 “또 이들 간판은 사유지 내에 있고 도로까지 튀어나와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어서 사업이 시작된 뒤에야 불법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에 반대한 한 업주는 “간판은 가게의 얼굴인데 왜 구청 마음대로 철거하고 미팅한 간판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제 철거할 거라면 동의를 받는 과정은 왜 거친 건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업주 동의를 받지 않은 업소를 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공사를 강행했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다”면서도 “다만 업소의 간판이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면 환경 개선 차원에서 예고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전남 초미세먼지 '역대 최저'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도권과 광주·전남·충남·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1년 대비 1~2.2μg/m³ 감소해 201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μg/m³에서 지난해 17μg/m³로, 전남은 2015년 25μg/m³에서 지난해 14μg/m³으로 각각 35%, 44% 이상 줄었다.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도 2015년 26μg/m³에서 지난해 18μg/m³으로 약 31% 줄어, 2021년 (18μg/m³)에 이어 2년 연속 최저를 유지했다.

특히 광주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등급 이상 발생 일수가 2021년 26일에서 지난해 15일로 11일

이 줄어 충남(-11일)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지자체로 꼽혔다.

환경부는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1~11월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52μg/m³에서 지난해 28μg/m³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같은 국내 정책과 중부지역 중심의 강수량 증가 등도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문제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지난해 말에 발표한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향후 10년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천희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광주 7개 대학 27개 학과 사라졌다

시민단체 “지방대만 희생하는 정부 지원 정책 개선해야”

최근 5년간 광주지역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가 폐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을 뽑지 못해 폐과하는 학과도 상당수여서 학생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대의 현실을 반영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6일 정보공개청구와 공익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광주 관내 7개 대학 폐과 현황과 교원 인사처리 방안을 분석해 공개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송원대 6개 학과, 조선대·호남대 5개 학과, 남부대 4개 학과, 광주대 3개 학과, 전남대·광주여대 2개 학과 등이 사라졌다. 폐과된 주요 학과는 에너지자원공학, 미술학, 대

체의학, 기계자동차공학 등이었다.

폐과 대상 교원은 총 97명으로, 송원대가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대 16명, 조선대 15명, 남부대 14명, 호남대 11명, 전남대 8명, 광주여대 7명 등이다.

의원면직 3명, 직권면직 1명 등 일부 교원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학과 배정 없이 강의를 하거나 임금이 삭감된 교원이 있는가 하면 직권면직 당한 피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시민모임 측은 “지방대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학교 구성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